

전남도,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 본격화

실무위원회 출범 조레 제정 추진 24일 1차 회의·유족 신고 접수

한국 현대사 비극으로 기록된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담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전 남도가 실무위원회를 출범하고 도의회 시행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또 21일부터 1년동안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를 진행한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오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오는 24일 도청 서재필

실에서 여순사건 실무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회의를 열고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접수 업무에 본격 나선다.

특별법에는 진상조사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두고 전남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실무위원회는 김영록 전남지사를 위원장으로 문금주 행정부지사(부위원장), 김기홍 자치행정국장, 전남도교육청 교육국장, 전북·경남 자치행정국장 등 당 연직 6명으로 구성됐다.

유족직 9명은 유족대표 3명, 군·경 유족대표 1명, 법조계 1명, 학계 1명, 전문가 등 3명 등이다.

전남도는 1개팀 3명의 지원단을 3개팀

13명(시·군 직원 6명 포함)으로 확대하고 시·군, 읍면동 담당자 440여명에 대해 여순사건 이해, 진상규명 조사, 희생자·유족 신고·접수, 사실조사 방법 등 교육도 마쳤다.

또 22개 시군 297개 읍면동 담당자 등 시군 책임공무원을 지정했으며, 도와 6개 시군 21명으로 시·군 사실 조사단을 꾸렸다.

더불어 위원회 출범과 희생자·유족 신고·접수 홍보를 위해 TV·라디오 등 언론 매체를 통해 홍보를 펼치고 있으며, 현수막·안내전단지·포스터 등을 제작해 배포를 완료했다.

오는 21일부터 1년 동안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가 진행된다.

진상규명 신고는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 친족과 진상규명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전국 시·도, 시군 구, 재외공관에 진상규명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해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조치와 관련, 유족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시행령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완료했으며, 내달부터 도의회와 협의해 시행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유족들이 대부분 70~80대의 고령으로 피해 신고 접수 등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시급하다"며 "여순사건 특별법의 취지를 살려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시, 예술인 지위·권리보장 강화

시민단체 등 민간협치TF 구성

광주시가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강화를 위해 시민단체 등 민간협치TF를 구성했다.

광주시는 지난 18일 민간협치TF 첫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인의 실태 파악 등의 견을 수렴하고, 소통 방안과 실질적인 지위·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발굴 등을 위한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민간협치TF는 오는 9월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정안 마련과 예술인 권리보장 정책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시, 시의회, 언론, 시민단체, 교수, 문화예술인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보호, 예술인의

권리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폐쇄적 예술계 환경과 권리구제 사각지대에 놓은 예술인에게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문화예술지원 사업 개선 실무TF에서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보조사업 공모시기를 앞당기는 등 기존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는 13개 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국 최초로 문화예술인 상해보험 가입을 시행하고 지난해 2월 문을 연 '예술인 보듬 소통센터'를 확대해 코로나로 지친 예술인의 일상회복 지원과 법률, 노무,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예술인을 원스톱 지원할 예정이다. /오선우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전담부서 신설 전남사랑도민 활성화 등 추진

전남도가 2023년 1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성공적 제도 안착과 시행을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연간 최대 500만 원)을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재원으로 지역 발전에 활용하는 제도다.

전남도는 사전 준비를 위해 2021년 12월 고향사랑기부금 토론회를 마련해 시군, 농민단체, 기관 등에 고향사랑기부금법의 추진경과, 정책제언, 해외사례 분석 등 성공적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서기관을 단장으로 하는 '고향사랑추진단'을 발족해 고향사랑기부제 범도민 인식 제고와 참여 확대, 기부 활성화, 고향도민 교류·협력 및 전남사랑도민증 활성화 등 제도 시행 대책을 추진토록 했다. /길용현 기자



동절기 안전점검 광주시 동구 서남동 자율방재단, 자율방재단 직원들이 19일 남동·금동 일원에서 동절기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공공시설물 파손 등에 대한 취약지역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동구 제공

전남 토지면적 축구장 1,513개만큼 늘어

지난해보다 10.8km² ↑

평균 공시지가 149조 규모

전남도는 2021년 말 기준 전남 토지면적이 1만2,359km²로, 전년보다 축구장의 1,513배에 달하는 10.8km²가 늘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평균 공시지가(1만2,089원/㎡)로 환산하면 149조 원 규모다.

토지면적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해남 산이면이다. 영산강 공유수면 매립지(10.8km²)가 준공된데 따른 것이다.

시군별 토지면적은 해남이 1,044km²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순천 911km², 고흥 807.3km², 화순 787km², 보성 664.1km² 순이었다. 필지 수는 해남 44만2,288필지, 고흥 40만5,908필지, 나주 39만667필지 순이다.

토지 이용 현황은 임야가 6,945km²(5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지 3,182km²(25.8%), 도로 458km²(3.7%), 대(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 312km²(2.5%), 유지(저수지·담·호수 등) 등 기타 1,462km²(11.8%)으로 나타났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농지나, 임야가 다른 용도로 전용됨에 따라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간척사업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도로, 대, 공장용지 등은 꾸준히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 전남의 토지면적은 전국토의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필지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다. 면적은 경북(1만9,035km²)과 강원(1만6,875km²)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이번에 확정된 면적은 2월 중 국토교통부 검증 과정을 거쳐 지적통계 연보에 수록할 예정이다. 토지정책 수립 등 기초통계 자료로 활용한다. 토지 관련 각종 통계는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길용현 기자

광주 새빛콜, 교통약자 선별진료소 전담반 운영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새빛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교통약자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새빛콜은 그동안 1일 평균 2.1명의 자발적 코로나19 검사 희망자에 한해 일반 운영 이동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확진자와의 동선 겹침 및 유증상으로 인한 검사자에 대해서는 운영 제한이 불가피했다.

이에 따라 최근 오미크론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적 상황과 선별진료소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유증상(확진자 동선겹침 포함) 장애인들을 고려해 이들을 대상으로 원활한 검사를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전담반'을 운영하게 됐다.

새빛콜은 지난해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전담조 편성과 전용차량(특장차량) 내 차단격벽 설치, 방호복 구입, 이용인홍 등 제반 조처들이 마무리되는 오는 24일부터 연중 무휴로 본격적인 이동서비스를 시작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제외)로, 접수 가능 시간은 전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익일 예약제로 운영된다. 예약 시간이 비어있는 경우 당일 추가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새빛콜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시비 및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오선우 기자

광주시,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대상 기업 40개·간접노무비 84만→94만원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출산휴가가 끝난 육아휴직자에 대한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출산휴가 기간은 제외돼 임산부 고용 안정을 위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따뜻한 광주 만들기를 위해 일하는 임산부 직장맘의 고용유지 방안으로 2021년부터 임산부가 출산 전후 3개월(다태아 4개월) 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간접노무비인 건강보험료와 퇴직적립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35개사였던 지원 대상을 40개사로 확대하고, 임산부 1인당 지원금을 84만 원에서 건강보험료를 상충을 반영해 94만 원으로 증액했다.

신청자격은 고용보험가입사업장으로, 관내 300인 미만 중소기업장 중 2022년 출산 휴가자가 있는 기업이며, 임산부의 출산휴가 전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고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고용유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062-613-7984)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서류 등은 광주시 또는 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명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은 중소기업의 임산부 자동육아휴직제와 출산 후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가족친화경영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임산부의 직장생활이 더욱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임산부 직장맘이 맘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광고·영양·분양·모임

· 광고국 062) 720-1016, 1017
· 팩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11000@hanmail.net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원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레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니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할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지사오피스 상담

호남지사 010-2175-4731 / 062-417-4731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질병관리청

봄바람, 코골이를 간질여도
머리 두기를 합니다
기다렸던 예방접종이 시작되어도
마스크를 씹니다

#우린 #방역에진심인편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회환 3단
근조회환 3단

정품 화환 75,000원 재사용 화환 50,000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월간 전남매일

지방자치 시대 동반자
분권시대 선도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E-mail : jnreviews@daum.net
구독문의 062) 720-1006